

1. 1994학년도 1차 수능 ...2쪽
- 시장의 성격 변화와 기업 활동의 변화
2. 1994학년도 2차 수능 ...4쪽
- 경제학이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
3. 2001학년도 수능 ...5쪽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교환관계
4. 2002학년도 수능 ...11쪽
-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의 종류
5. 2003학년도 9월 모평 ...15쪽
- 노동 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정 3자의 견해차
6. 2006학년도 9월 모평 ...19쪽
- 카네만의 인지 심리학적 경제학 연구
7. 2006학년도 수능 ...23쪽
- 옵션의 원리와 기능
8. 2008학년도 6월 모평 ...28쪽
- 위치적 외부성의 의미와 효과
9. 2008학년도 수능 ...31쪽
-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과 할인율의 적용
10. 2009학년도 6월 모평 ...34쪽
- 조세전가 현상의 이해
11. 2010학년도 수능 ...37쪽
- 기업 결합의 성립 요건
12. 2011학년도 9월 모평 ...41쪽
- 환율의 상승과 J커브 현상의 이해
13. 2011학년도 수능 ...46쪽
- 채권 가격의 형성 요인에 대한 이해
14. 2012학년도 9월 모평 ...49쪽
- 한계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가격 결정
15. 2012학년도 수능 ...52쪽
- 외부성 현상과 그 해결책
16. 2013학년도 수능 ...54쪽
- 연금 제도의 시행 목적
17. 2014학년도 예비B ...58쪽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이해
18. 2015학년도 6월 모평A ...61쪽
- 인센티브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
19. 2015학년도 6월 모평B ...64쪽
- 광고 피해의 책임 주체와 광고의 규제
20. 2015학년도 수능A ...68쪽
- 공공 서비스의 특성과 종류
21. 2015학년도 수능B ... 72쪽
- 시민 사회와 산업 자본주의
22. 2016학년도 6월 모평AB ... 76쪽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3. 2016학년도 6월 모평B ... 80쪽
- 백과 바우만의 '현대의 개체화 현상'
24. 2016학년도 9월 모평A ... 84쪽
-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25. 2016학년도 9월 모평B ... 89쪽
-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26. 2016학년도 수능B ... 93쪽
- 지식 경영과 암묵지
27. 2017학년도 9월 모평 ... 97쪽
- 일인 주주 회사와 법인격 부인론
28. 2017학년도 수능 ... 102쪽
- 보험료 산정과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29. 2018학년도 6월 모평 ... 쪽
- 통화 정책의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
30. 2018학년도 수능 ... 쪽
- 환율의 오버슈팅
31. 2019학년도 9월 모평 ... 쪽
- CDS 프리미엄
32. 2019학년도 수능 ... 쪽
- 채권과 채무
33. 2020학년도 6월 모평 ... 쪽
- 미시 건전성과 거시 건전성
34. 2020학년도 9월 모평 ... 쪽
- 점유와 소유
35. 2020학년도 수능 ... 쪽
- 바젤 협약
36. 2021학년도 6월 모평 ... 쪽
- IC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37. 2021학년도 수능 ... 쪽
- 예약의 유형
38. 2022학년도 9월 모평 ... 쪽
- 광고의 효과와 영향
39. 2022학년도 수능 ... 쪽
- 트리핀 딜레마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태도를 바꾸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다. 즉, 제품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단 상품을 생산해 놓고 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생산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소비자)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이념은 변함 없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은 변화한다.

(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체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은 기업과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 등과 관련된 요인을 ㉠ 잘 살피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단지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간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현대 기업은 단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27. 밑글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① 기업 활동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O) 시장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기업 활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⑤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어떠한가?
 → (X)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서 '제품'과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의하면 '생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과 '서비스'의 관계는 본문의 극히 일부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28. (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당이 되는 어구는?

③ 호혜적 관계
 → (O) (나)는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는(시장의 성격 변화) 기업이 소비자와의 호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기업의 활동 변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단기적 이윤추구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호혜적 :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29. 다음 중, 그 뜻이 ㉠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단어는?

① 경시(輕視)했다
 → (X)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기다.

② 간과(看過)했다
 → (O)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③ 몰각(沒却)했다
 → (X) 「1」 아주 없애 버리다. 「2」 무시해 버리다.

④ 무시(無視)했다
 → (X) 「1」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2」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⑤ 묵과(默過)했다
 → (X)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넘기다.

30. ㉠과 같은 기업 활동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⑤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한다.
 → (X)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이며,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본문에서 예로 든 '환경 문제나 사회 복지'와 같은 것)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제품 생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그 존속과 성장을 위해 소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은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제시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세계 경제는 어떠했을까요?

16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주로 상업 활동에서 이윤을 창출했던 상업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19세기 말에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산업자본주의 말기에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을 망하게 하거나 병합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 자본에 은행 자본까지 융합되면서 덩치가 커진 소수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기업에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던 만큼 새로운 경쟁자는 나타나기 어려웠죠.

이렇게 소수 대기업이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던 시대는 1929년 대공황을 시작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세계 경제가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소비자들의 구입이나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었고, 이는 곧 생산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독점자본주의 체제는 대기업의 대량생산을 받아줄 독점적 소비자장인 식민지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함께 가는데요, 대공황 기간 동안 제국주의 열강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전개합니다. 자신들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식민지 등)을 각자의 경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관세 장벽을 높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경제 블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정치적 평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차원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번영과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브레턴 우즈 협정이 맺어집니다. 1944년 미국 브레턴 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

제*의 도입을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번영을 도모한 국제회의였죠. 협정문 전문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이제 각국은 국제 금융거래의 문제에 대해 서로 조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계의 번영에 해롭다고 의견이 일치된 행위는 불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수지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

이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탄생합니다.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같은 국제무역의 규칙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와 무역장벽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정치적으로는 미국-소련 냉전 체제가 세계를 양분하고, 경제적으로는 브레턴 우즈 체제로 자유무역이 강조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산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제시문의 서술은 바로 이러한 기업 활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기축통화 Key Currency :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후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동안 막대한 부를 얻은 미국이 브레턴 우즈 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금 1온스(28.35g)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금환본위제를 수립한 것이죠.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2/3를 보유하고, 전 세계 산업 생산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던 전무후무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협정이었습니다.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환율의 변동을 정부가 통제하여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35달러는 금 1온스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규정해놓았고 나머지 국가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금을 기준으로 모든 화폐가 일정한 교환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환율에 개입하는 체제를 고정환율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법칙은 합리적인 사람이 많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에 잘 적용되는 법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자질이 떨어질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처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제 동향에 미치는 ㉠민심의 흐름이나 경제 사회 분위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실 사회에 그 처방을 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방향은 ㉡민심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나 동물 근성도 잘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쉽사리 감정적이 되며, 경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동물 근성이 잘 발동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 안정은 근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예측이 어렵다. 가령 일기 예보의 경우에는 내일의 일기를 오늘 예보하더라도 일기가 예보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예측(景氣豫測)의 경우에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가령 ‘값’은 젊고 유능하며 부양 가족이 없는데도 많은 봉급을 받는 데 비하여, ‘을’은 늙고 무능하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데도 적은 봉급을 받는 경우, 양자의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 값이 집 없는 사람의 봉급보다 빨리 상승한다든가, 고급 주택의 건설이 많아진다고 할 때,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43. 밑글에서 경제학이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감정 ② 합리성 ③ 가치 판단 ④ 동물 근성

→ (O) <해설 생략>

⑤ 지역 경제

→ (X) 지역 경제는 본문 어느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경제 정책을 만들 때에는 지역 경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요.

44. 문맥상 ㉠, ㉡에 공통적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것은? [0.8점]

① 여파(餘波)

→ (X) 「1」 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2」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

② 정세(政勢)

→ (X) 정치상의 동향이나 형세.

③ 사조(思潮)

→ (X)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④ 여론(輿論)

→ (O)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⑤ 풍문(風聞)

→ (X)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45. ㉢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 (X) 악순환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 (X) 악순환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 (X) 인과적 연쇄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 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O) 예언 및 예측(큰 인물이 되리라고)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므로(큰 성공을 거둠) 적절한 사례입니다.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 (X) 인과적 연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 (X) 대칭적 상호주의는 일상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② 사람들의 기호 및 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 (O) 셈에 밝은 경제적 인간들은 선호나 기호, 가진 자원이 다양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③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쌍방에게 이익을 준다.
- (O)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상호 이익을 보장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 (O) 윗글은 호혜적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시장을 들었고, 시장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행위자의 자발성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교환 과정의 공정성은 곧 절차적 공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 (O) 반시장적 요소는 강매나 사기와 같이 자발성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시장적 요소는 자발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견지하다: 【…을】 「1」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키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밟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색)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가설을 먼저 설정한 후, 그것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였다.

→ (X) 윗글에는 어떤 가설*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설:

「1」『철학』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

「2」『사회 일반』 사회 조사나 연구에서,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

②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였다.

→ (X)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둘 이상의 학설*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설: 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③ 정의, 비교·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 (O) 윗글은 상호주의와 시장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고, 대칭적 상호주의와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비교하여 더 일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탈리오의 법칙이 지닌 두 가지 속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가 사용되었음은 물론이요. 이들은 모두 ‘사회적 관계’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대조: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참고: 논지 전개 방식에서 비교와 대조를 구분하는 일은, 수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나타난 뜻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선지에서도 가운데뎛점(-)을 활용하여 ‘비교’와 ‘대조’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④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로부터 현상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도출하였다.

→ (X) 윗글은 특수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는 귀납* 추리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납: 『철학』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 내는 일.

⑤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을 대비한 다음,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 (X) 윗글에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절충적 관점도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색)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39.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 (O) 뒷글에서 ‘경제적 인간’을 수식하는 데 활용된 ‘셈에 밝은’이란 문구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 쓰인 ‘셈을 따져서’ 또한 이익과 손해를 따진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박경리, 「토지」)
- (X)
-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리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김유정, 「안해」)
- (X)
-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염상섭, 「삼대」)
- (X)
-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받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유주현, 「하오의 연가」)
- (X)

*셈

[I] 「명사」

- 「1」 수를 세는 일.
-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는 일. 또는 그 돈이나 물건.
-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는 일.
- 「4」 이익을 따져 보는 생각.
- 「5」 생활의 형편.
- 「6」 어떤 일이나 사실의 원인. 또는 그런 형편.
- 「7」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II] 「의존 명사」

- 「1」 ((주로 ‘-은/는 셈이다’, ‘-은/는 셈으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형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말.
- 「2」 ((주로 ‘-을 셈이다’, ‘-을 셈으로’ 구성으로 쓰여))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
- 「3」 ((주로 ‘-은/는/을 셈 치다’ 구성으로 쓰여)) 미루어 가정함을 나타내는 말.

*셈하다

「동사」【…을】

- 「1」 수를 세다.
- 「2」 주고받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따져 밝히다.
- 「3」 수를 따져 얼마인가를 세어 맞추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0.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O)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갑이 을의 모내기를 도와주면, 을은 나중에 갑이 요청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교환되는 노동의 양이나 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갑이 100개의 모를 심었으므로, 을도 나중에 100개의 모를 심어준다든지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X) 사재기는 행위자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판매자의 판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재기는 호혜적 교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폭리: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O) 점심을 늘 같은 메뉴로 같은 장소에서 먹는 것이라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상식에 기대어 의미를 해석해보자면(이 시험의 과목명은 논리학이 아니라 언어 영역임) 서로 다른 가격의, 서로 다른 메뉴를 서로 제공하는 호혜적 교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할인 매장에서 짤깁으로 물건을 샀다.

→ (O)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물건 날개당 남기는 이윤이 일반 매장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는 개별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개별 거래에서 조금 이익을 덜 보더라도,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중심가에서 멀어 매장의 임대료는 싸지만 구매자가 방문할 기회가 적은 매장은, 정상가로 판매할 때보다 할인가로 판매했을 때 거래량이 많아져 최종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품을 다량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존의 매장 재고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도 할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할인 매장에서 교환되는 내용은 양과 질의 측면에 있어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고(할인된 가격), 상호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혜적 교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 (O) 중고 물품은 교환되는 내용이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물교환은 전형적인 호혜적 교환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푸는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각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41.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발문 해설) 어떤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해당 주장(B)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A)를 본문에서 명확히 찾아야 합니다. ‘A이기 때문에 B하다’는 식으로 본문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찾았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1)A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2)A가 B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부정하거나, ㉣의 근거만으로는 ㉣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①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 (X) 반시장적 행위는 상호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상호주의는 서로의 행위가 짝을 이루어야 하는데, 반시장적 행위의 예시로 나타난 강매, 사기, 도둑질은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②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 (X) 뒷글에서 반시장적 행위는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에 부족한 무언가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한다고 볼 수 있어 ②번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이 됩니다. 그러나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 논거를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하다: 「동사」 【…을】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

③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 (X)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입니다. 그러나 역시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④ 시장에는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선지 자체는 적절한 서술입니다. 만약 시장에 탈리오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쌀 100kg을 쌀 100kg과 맞바꾸려 힘들게 시장까지 나온 판매자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에 대한 반론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⑤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
→ (O) 위 선지의 경우 ㉣의 근거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될 수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는 (발문 해설)에서 설명한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선지는 ㉣을 반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탈리오의 법칙은 lex talionis를 번역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lex는 법을 뜻하며 talionis는 보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좌법, 동해보복법(같은 해로움으로 보복)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법칙은 원시 사회의 정의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제196조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제200조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

성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고대 사회의 잔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탈리오의 법칙이 고대 국가 단계로 접어들어 진일보한 정의 관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국가 성립 이전의 사회에서는 상대의 공격에 대해 무제한적 보복이 이루어졌었는데, 고대 국가 단계로 넘어오면서 법률로써 개인 간의 복수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확히 상대가 손해를 끼친 수준까지만 보복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보복에 대해 재보복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 보복이 이루어지는 혼란한 사회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셀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기애로부터 비롯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경제활동으로부터 그의 수익(만족, 효용,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 인간의 모습은 ‘경제적 인간’이란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인간’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 이론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인간’의 ‘합리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곧 ‘합리적 선택’을 의미하는데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하며, 비용은 선택의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 인간’이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안을 선택하고,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합리성을 지녔다고 가정된 인간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8점]

①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 (O)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재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 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ex) 빵, 옷, 주택

***서비스: 형태는 없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행위. ex) 교육 활동, 의료 활동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 받는다.

→ (X) 윗글에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단기 이익은 극대화 되지만 장기 이익은 감소하거나, 단기 이익은 감소하지만 장기 이익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의 서술은 기업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윗글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 손해를 달갑게 받아들이면(감수하면) 단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지, 이로 인해 장기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윗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 시켰다.

→ (O)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④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 (O) 주주는 전문 경영인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여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주주의 적절한 감시가 없다면 전문 경영인의 비효율적 경영 활동으로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 집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O) 윗글에서는 오늘날의 기업이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장기 이익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①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19.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한 것은?

①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X) 극장이 대형화되는 것은 질적 변화 없이 양적으로만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윗글에서 설명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②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 (X) 우주의 신비가 점차 밝혀지는 것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무지가 줄어드는 것, 또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질적 변화 없이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변화입니다.

③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다.
 → (X) 자동화 설비는 기존 생산 활동 수단보다 더 뛰어난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는(끌어들이는) 목적은 기존보다 '생산 활동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수단이 무엇이었던, '자동화 설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준만 더 높음) 이는 질적으로 다른 목적이 추가되는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 (O) 윗글에 나타난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은 '자본가의 이익', 즉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목적인 '사회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A + B)

선지 ④의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 추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환경과의 조화'도 고려하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기존의 목적과 질적으로 다른 목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선지의 '인간'의 '고려' 사항의 변화 과정은 기업 목적의 성격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다가 점차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게 되었다.

→ (X) 초기에는 음식을 버리다가 이후에는 저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B

따라서 이는 윗글의 기업 목적 성격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0. 밑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 : 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논지: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긴요하다: 「형용사」【…에/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① TV 방송 : 카메라

→ (X) 밑글에 나타난 ‘기업’과 ‘이익’의 관계는 ‘활동 주체’와 ‘활동 목적’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방송과 카메라의 관계는 이러한 ‘활동 주체 : 활동 목적’의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는 TV 방송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② 시계 : 톱니바퀴

→ (X) 톱니바퀴는 시계의 구성요소입니다.

③ 연주회 : 지휘자

→ (X) 지휘자는 연주회를 성립시키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④ 스포츠 : 규칙 준수

→ (X) 규칙 준수는 경쟁을 스포츠로 인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⑤ 정당 : 정권 획득

→ (O) 정당*의 활동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 이익’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세 번 칫솔질할 것을 권장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두가 이처럼 이를 닦으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져서 치과 의사의 단기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므로 치과 의사로서는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칫솔질을 자주 하지 않으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소자본끼리의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에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소유자가 곧 경영자였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자본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주의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경영자의 이러한 비효율적 경영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 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2. ㉠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업원 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X) 종업원 연수의 목적이 직무 능력 향상이라면, 이는 기업이 소유한 (인적) 자원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와 같은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사례로는 볼 수 있겠으나,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업원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직무 능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업원 연수의 기회 확대'도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므로 위 선지 또한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이는 기업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켰다는 의미이다.' 문장을 보아도 '기업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업의 이익' 그 자체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말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②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 (O) 고객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

→ (O)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투자는 다원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환경 단체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지역 사회에 안락한 공원을 조성해 준다.

→ (O) 지역 사회 또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이들의 안락함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불우 이웃을 위한 성금을 낸다.

→ (O) '불우 이웃'은 본문에서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불우 이웃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들 또한 기업 활동과 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금 출연'은 사회적 이익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 생활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②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은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하여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X) 밑글에서 기업은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을 뿐입니다.

② 노동자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 (O) 밑글에서 노동자 측은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인간 관계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로 인한 회복과 재충전은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밑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노동자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O) 밑글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여가 시간을 늘리고,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승은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이익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이는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력: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

**경쟁하다: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다.

*제고하다: 쳐들리어 높아지다.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O) 밑글에서 기업은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동일하므로 실제 노동 시간은 그대로일 것인데, 법정 노동 시간만 줄어든 것이므로, 줄어든 법정 노동 시간만큼 시간 외 일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초과 임금 지급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는 선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전) 10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4시간 + 초과 56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10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 + 초과 60시간

⑤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뿐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다.

→ (O) 밑글에서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기대하며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②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4.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이 감량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 (X) 감량 경영 체제는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알맞게 줄여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것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불황/호황)이지, 노동 생산성 증가가 아니므로 선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②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 (O) ㉠의 주요 근거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법정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도 실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체 노동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기보다는 추가 고용을 통해 부족한 노동 시간을 채우려 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전) 총 440시간 = 44시간 × 노동자 10명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총 440시간 = 40시간 × 노동자 11명
(+10% 고용 창출 효과)

그러나 만약 정부의 전제가 틀렸고, 노동자 측의 주장처럼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노동자의 수로 생산되는 상품의 양이 유지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서(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다름) 기업에서 굳이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전) 연필 440개 = 44시간 × 노동자 10명(시간당 1개)
노동 440시간
↓ (법정 노동 시간 4시간 단축) ↓
(후) 연필 440개 = 40시간 × 노동자 10명(시간당 1.1개)
노동 400시간 (+10% 생산성 향상시)

따라서 ㉠의 숨어 있는 전제인 노동 '생산성의 비향상'을, 노동자 측의 논거를 인용하여 공격한 선지 ㉡의 반론은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일자리 공유가 불가능해진다.

→ (X) 뒷글에서 기업 측은 노동 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부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 했습니다. 인력난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④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이 노동자 수를 감축하여 실업자가 양산된다.

→ (X) 뒷글 어디에서도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수에 대한 감축 우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 (X) 노사 갈등의 심화가 실업자 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과 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5.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의 불만이 증폭된다.

→ (X) 농어민은 노동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맞습니다만, 애초에 법정 노동 시간의 제약이나 혜택을 받았던 계층이 아니므로 노동 시간 단축에 의해 새롭게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 (X)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라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수요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관련 기업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쟁을 사회 계층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어 기업과 환경 단체 사이의 대립이 늘어났다.

→ (X)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광지의 환경이 파괴되는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과 환경 단체가 대립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광지 환경 파괴의 원인은 기업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관광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④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 기업 노동자의 박탈감이 커진다.

→ (O)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전격 도입되는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지, 이에 대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보면 노동 시간 단축이 사업장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음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 의무 적용을 하고, 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을 배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의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 시간 단축에 의해 발생한 갈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 예시로 적절합니다.

*사업장: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

*영세: 「2」 살림이 보잘것없고 몹시 가난함.

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다.

→ (X)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동자는 부유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과 부유층-빈곤층 사이의 갈등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주당 40시간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이른바 노·사·정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의 양보다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노동 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한 개인으로서 인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론, 노동자로서도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된다. 이 경우 직장 외 생활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잔업이나 특근 등 지난날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직업병과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에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 차질과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마찰 때문에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성급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야기될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①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당 노동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토요일 휴무에 의한 주 5일제 근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문화·교육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②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단절이 확산되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6. 뒷글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① 기업의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 (X)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소기업이 택해야 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기업 측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 측에서 주장된 바가 아니며,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정답으로서 부적절합니다.

②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O)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들었고, 기업 측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의 부정적 효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주체 모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 (X) 뒷글에서 기업 측은 법정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 수준이 높은 사업(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선지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된 것이지만 기업 측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④ 중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X) 뒷글에서 기업 측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넓게 보면 기업 측에서는 선지④를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이를 동의한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도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성하다: 길러 자라게 하다.

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 (X) 뒷글에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정부로 나타납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업 측에서는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만 나타날 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읽어들 수 없습니다.

*인력난: 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위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 (X) 카네만이 등장하기 전, 이미 1930년대에도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한 케인스 경제학이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 (X) 뒷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듯 케인스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 (X) 뒷글에서 확률 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이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는 것을 그저 알아냈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 이를 시정했다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정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 확률 인지 심리학의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 (O) 뒷글에서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성과)는 경제학의 방법론(접근 방법)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나타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막연한 가정(합리적으로 행동)보다는 그(인간 행동)에 대한 관찰(심리학적 연구)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 관찰에 기초하여 합리성을 논한다.

→ (X) 뒷글에 나타나듯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 행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왔습니다. 따라서 '관찰에 기초'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고, '합리성을 논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A]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위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7. 문맥상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1점]

㉠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 (X) '직관'이나 '충동'과 관련된 어휘가 없습니다.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다. 그것은 공학이다."
-마코비츠, 포트폴리오 선택(1952)

㉡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 (X) '직관'이라는 어휘가 그대로 쓰였습니다만, '직관'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가치 판단이 드러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인간 행동에 대한 사실적 서술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어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 (X) '시장'을 인간의 '합리성'이나 '충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마음대로)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케인스가 했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 (O) 윗글에 나타난 케인스의 생각에서 핵심어를 찾아 보면, '합리성' vs '직관' + '충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가 잘 나타나는 선지가 바로 위의 ㉣번 선지입니다.

㉤ 과학의 장점은 우리 인간을 미혹으로 이끄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는

→ (X)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케인스의 인간 행동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위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8.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전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다섯 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O) 이 선지를 보고, “나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윗글만으로 어떻게 교통사고보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을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의 의문은 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의 핵심은 ‘주관적 추론’의 부정확성이 아닙니다. 추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비합리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위 선지에 대한 판단 포인트는 ‘때문에’에 있습니다. 매체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사망 사례)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위암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그 인과 관계의 비합리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선지는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합니다.

③ 50달러와 25달러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75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데 반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100달러를 내고 다음에 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④ ‘ $1 \times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times 8$ ’이라고 칠판에 쓰면서 5초 이내에 답하라고 하였을 때 응답자들이 낸 답의 중앙값은 512였으나, ‘ $8 \times 7 \times 6 \times 5 \times 4 \times 3 \times 2 \times 1$ ’이라고 쓴 경우에는 2,250이었다. 정답은 40,320이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⑤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데 반해, 12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는 29%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 (X)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에 근거한 판단이 아닙니다.

날마다 언론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2년에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의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의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 인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에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거나, ㉡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 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 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험(risk)’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하는 비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은 모순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손실은 언제나 이득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다루어 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39. [A]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피실험자들에게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못 얻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벌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다. 앞의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댓값(3,200달러)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의 80%가 확실하게 3,000달러를 벌는 쪽을 선택하였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한 것이다.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이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인 경우와,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물었다. 이 실험에서는 92%의 응답자가 손실의 기댓값이 더 큰 도박 쪽을 택했다. 이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한 것이다.

- ①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은.
 - (X) 뒷글에서 위험에 관한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태도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호 또는 기피라는 태도 그 자체만으로는 비합리적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 결과이군.
 - (O) 뒷글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③ 경제학적 합리성에는 위배될지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 (O) <보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은 경제학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태도의 비일관성),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손실 기댓값이 더 크고 위험하더라도 선택을 강행하는, 손실 회피의 측면에서는 나름의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 ④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하는군.
 - (O) <보기>에서 100%로 3000\$를 얻게 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에 비해 기대되는 이익(기댓값)이 200\$ 더 적더라도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 ⑤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 값이 기댓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하는군.
 - (O) <보기>에서 위험하다고 서술된 선택은 기댓값과 결과 값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안전하다고 서술된 선택은 기댓값과 결과 값이 동일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는 두 값의 거리가 곧 위험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주식 옵션은 매매될 수 없다.

→ (X)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주식 옵션)을 샀다고 했으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주식 옵션을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므로, 본문에서 ‘샀다’는 말만 나타나도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매: 물건을 팔고 사는 일.

②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 (O)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옵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③ 옵션의 행사 가격은 행사 시기에 가서 정해진다.

→ (X) 옵션의 행사 가격은 옵션이 매매되는 시점에 이미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④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은 없다.

→ (X) 뒷글에서 ‘옵션’은 ‘금융 상품’의 하나라고 했고, ‘기초 자산’은 어떤 상품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반드시 주식이어야 한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있다는 본문의 문장을 살펴보면, 기초 자산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주식 옵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⑤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을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이다.

→ (X) 미래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이득을 지칭하는 용어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압착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압착기를 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착기를 빌리기는 더 쉬워질 겁니다.

③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착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겁니다.

④ 압착기 임대 계약금을 돌려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 (X) 적절한 추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옵션은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⑤ 압착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수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 (O) 뒷글에서 기하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기하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파악해봅시다 (농담입니다). 탈레스가 이윤을 남기려면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가 수확기의 임대료보다 낮아야 합니다.

수확기 임대료 - 계약 임대료 = 이윤!
(단, 수확기 임대료 > 계약 임대료)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올리브 농사가 풍작이어야 합니다. 풍작이면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짐) 가격이(임대료가) 상승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흉작이면 어떻게 될까요? 흉작이면 압착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빌리려는 사람이 적어짐) 가격이(임대료가) 하락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확기의 임대료가 계약한 임대료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수확기 임대료가 100₩인데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가 200₩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200₩에 빌려서 시장에서 다시 100₩에 빌려주면 한 대를 빌려줄 때마다 100₩씩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였든간에 옵션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옵션을 행사하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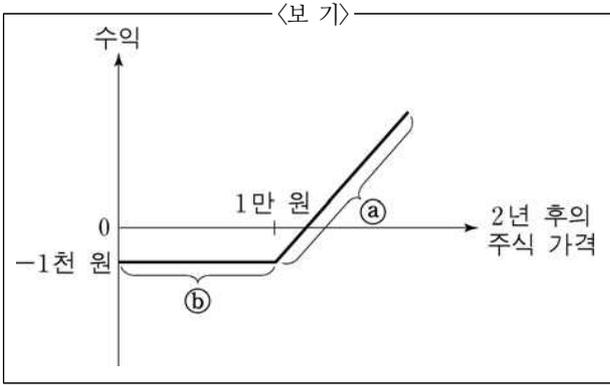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A]

54.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㉑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O) [A]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래프상으로 주식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서 순간부터(㉑구간) 수익이 -1000₩에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㉒구간의 일부는 분명 수익이 음수값(-)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왜 본문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것 일까요? ㉒구간에서 음수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주식 가격이 10000₩ ~ 11000₩인 구간입니다.

<주식 가격이 11,000₩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주식 옵션을 행사해서 10,000₩에 사서 (-10,000₩)
 주식 시장에 갖다팔면 11,000₩을 얻고 (+11,000₩)
 주식 옵션의 프리미엄인 1,000₩을 빼면 (-1000₩)
 결국 남는 것은 0₩!

만약 주식 가격이 1만₩이 넘은 순간부터, 그래프상에서 수익이 0이 되는 지점인, 주식 가격이 1만1천₩이 되는 시점까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조금이나마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1000₩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즉 주식 가격이 10001₩인 경우, 옵션을 행사하면 1₩의 차익을 얻어 이미 지불한 비용인 옵션 프리미엄 -1000₩의 손실을 -999₩로 줄일 수 있었기에 그래프가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단 1₩이라도 높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㉑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O) 뒷글에 나타나듯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옵션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인 -1000₩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③ ㉑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X)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손실이 일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낮은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주식 가격이 하락한 만큼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 가격이 9,000₩이라면, 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0₩의 손실이 발생하고(계약 금액은 10,000₩이었으므로 주식을 10,000₩에 사서 9,000₩에 되파는 삽질),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 비용이 있었으니 -1,000₩이 가산되므로 손실이 -2,00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④ ㉑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O) ㉑구간은 주식 가격이 10,000₩보다 낮아서 옵션을 포기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식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든 손실이 -1,000₩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옵션 프리미엄이 1,000₩이었기 때문입니다.

⑤ ㉑와 ㉒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O) ㉑의 모양이 우상향인 것은 옵션 보유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고, ㉒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옵션 보유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옵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익의 비대칭성, 즉 손실의 최댓값은 옵션 프리미엄의 크기만큼으로 일정하지만, 수익은 주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례하여 상승하는 옵션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 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이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5.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경영자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도록

→ (X) 뒷글에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 (O) 경영자가 주식 옵션을 갖게 된다면, 경영자의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주식 가격이 옵션에 계약된 가격보다 상승한다면, 상승한 차액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면, 결국 회사의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경영자가 덜 위험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 (X) 뒷글에서 설명하듯 주식 옵션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자는 더욱 공격적인 경영활동, 주식 가격의 하락 위험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자가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 (X) 뒷글에 사업의 다각화, 즉 다양한 방면으로의 사업 전개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경영자가 사회 공익을 추구하도록

→ (X) 뒷글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래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속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래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①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래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①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O)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한다는 것은,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의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성이 높은 경쟁자, 즉 자신과 순위가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 예를 들어 매년 1~2위를 다투는 최상위권 야구팀은 만년 꼴찌인 야구팀이 겨울 전지훈련을 하와이로 가든 뉴욕으로 가든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반면 올해 준우승팀이 모기업의 지원 아래 겨울 전지훈련을 LA로 가서 메이저리그 팀과 함께 훈련을 하기로 했다면, 올해 우승팀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쿠바 대표팀을 초청하든가, 다른 메이저리그 팀과 협력을 추진하든가 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왕좌를 지킬 수 있겠죠.
-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O) 각자의 상대적 성과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투자를 늘리면 경쟁자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가 하락하고, 하락한 순위(상대적 위치)는 위치적 보상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이지요.
-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X) 위치적 보상은 경쟁자의 성과와 자신의 성과에 따른 상대적 위치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입니다.
 - *유인: 어떤 일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 *(경제적) 유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
 - ※ 경제 관련 글에 나타난 '유인'은 '경제적 유인'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O)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협약은 사회적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 (O) 경쟁의 결과, 경쟁자들 간의 순위가 변화했다면 상대적 위치가 상승한 사람은 이익이 되겠지만 하락한 사람은 손해일 것입니다. 만약 경쟁자들 간의 순위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경쟁을 위한 지출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O)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경쟁자)들 중 1명만 당선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후보가 '사퇴'라는 성과를 보인다면,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경쟁자A)의 상대적 성과에 의해 다른 후보(경쟁자B)의 위치적 보상이 영향을 받는 위치적 외부성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X) 유명 가수와 참가 선수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만약 유명 가수에게 그 어떤 비용도 지불된 바가 없다면, 또는 비용이 지불되었더라도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 참가 선수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성 현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O)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경쟁자입니다. 모두들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상대적 성과)에 따라 좌석(위치적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는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O) 서로 취학을 미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학부모들 간의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시야말로 위치적 외부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줄을 세우는 시험에서의 위치적 외부성은 필연적입니다.
-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 (O) 많은 사람들이 (A-B, C-D, E-F, G-H ...) 동시에 말을 하고 있으면, 더 크게 말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의사소통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이런 상황은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 (X)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 경쟁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위치적 외부성 및 위치적 군비 경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
 - (O)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이 일정할 때,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등, 2등, 3등...에 대한 보상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 (X)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면, 과도한 경쟁이 차단됩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행위가 예방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O) 위치적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위치적 보상(편익)이 지출(투자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출(투자 비용)이 위치적 보상(편익)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를 보는 셈인데, 그런 전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①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X) 이 글에서 시장 이자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바람직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하나의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X)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납니다만, 자본 시장(대출과 저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X)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은 이 글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O) 뒷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문단: 사업 타당성 진단에 활용되는, 할인율의 개념
 - 2문단: 공공사업의 타당성 진단에 활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 3문단: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간주하자는 주장의 근거와 요지
 - 4문단: 사회적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 및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 책정의 방향.
 종합하면, 뒷글은 사회적 할인율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장의 논리를 비판하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 (X)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타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X) 민간 투자가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X) 선도한다는 것은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한다는 것인데, ㉠의 내용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는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같은 부문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투자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은 오히려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라면 정부는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듯한 뉘앙스의 문장입니다. 동등한 투자 기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수익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좀 된다 싶은 공공 부문의 사업이라면, 민간이 알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정부는 손을 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중에서도 수익률이 낮아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 주장입니다.

㉤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 (O) ㉠의 내용을 쪼개어 보겠습니다.

1.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으로 볼 수 있다.

2. 민간 투자가 가능한 공공 부문은 정부의 투자 필요성이 작다.

이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은, '3. 정부의 투자는 낮은 수익률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공공 부문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①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 <보 기> —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 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놀이동산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딱딱 깎아내릴 것입니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깎이는 양이 적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점에서 세일할 때 할인율이 높으면 물건 값을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낮으면 물건 값을 적게 깎아주는 것이고요. 사업 타당성도 똑같습니다. 열도당도 않은 사업은 높은 할인율로 후려쳐서 낮은 현재 가치를 매기게 되고, 그럴듯한 사업은 낮은 할인율로 조금만 깎아서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O)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자연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놀이동산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딱딱 깎아내릴 것입니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개발 업체는 사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할 것입니다(당위성 확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자기 사업의 현재 가치를 자기가 후려칠, 너무나 검소한 사업자는...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놀이동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이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업의 현재 가치를 크게 깎아내리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X)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현재 가치를 대폭 깎으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 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정부가 불문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A]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O) 윗글에서는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여 구입량이나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구입량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소비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많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생산자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X) 조세전가의 혜택은 하나의 주체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자신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지만 타인은 부담을 떠안은 셈이 되므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X) 윗글에서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은 조세 부과 단계에서 결정되는 고정값으로 나타납니다. 조세전가 현상은 정부의 조세 부과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따라서 선후관계도 맞지 않고, 조세액이 바뀐다는 서술도 맞지 않습니다.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X) 실질적인 세금 부담 비율은 두 경제 주체가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실질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시장 가격 상승에도 소비량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소비자인 경우), 위의 서술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 (X) 조세전가는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의해 실현됩니다.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면, 조세전가도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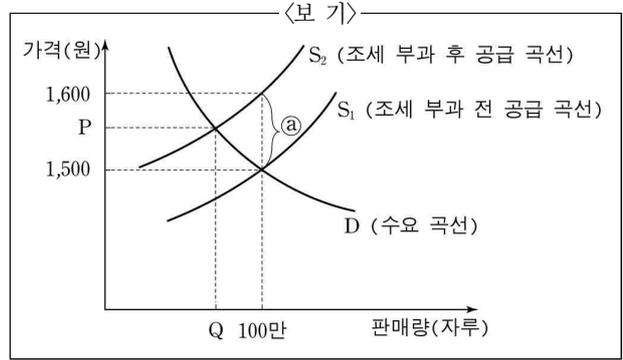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 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문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려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①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②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O)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 곡선인 D가 공급 곡선 S와 만나는 교점의 가격은 1,500원이 아닌 P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하고, 생산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받게 됩니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a를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O) [A]에서 세금의 납부자는 '생산자'입니다.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물론 100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위 선지의 포인트는 정부에 최종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를 납부하느냐이므로 '생산자'가 '100'원을 '납부'한다는 서술은 적절한 서술입니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X) S1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S2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S1은 조세가 부과되기 '전'입니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O)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1500원이었던 불펜이,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가격이 P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P-1500원만큼 소비자는 세금을 전가받은 셈입니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 (O) [A]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보기> 그래프 상의 S2와 D의 교점은(Q, P) 100만자루보다 0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문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X)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가격 변화)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바나나 구입량 크게 변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X) 커피 가격이 오르면(가격 변화)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커피 구입량 크게 변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X)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른 것에 구매되지 않고 오직 가격의 변화에 따라 구입량이 크게 변화하는 소비자이므로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X)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 내놓는 생산량을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창고에서 대량으로 출하하고,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창고 문을 닫아 두는 것이죠. 이런 농장주는 가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 (O)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액세서리의 시장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생산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아지니까 매대에서 거둬서 다시 재고로 쌓아둔다?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데 재고를 유지한다?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의 처분세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X)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윗글의 핵심입니다.
-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X)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X) 국제 경쟁력 강화는 분명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글은 정부가 기업의 결합 과정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심사하고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 (X)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은 윗글로부터 추론해내기 어렵습니다. 윗글에 소개된 기업 활동은 다양한 기업 활동 중 기업 결합 하나일 뿐이고, 그러한 기업 결합의 위법성 여부조차도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 (O) 첫 문단의 내용은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정부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취지*는 위 선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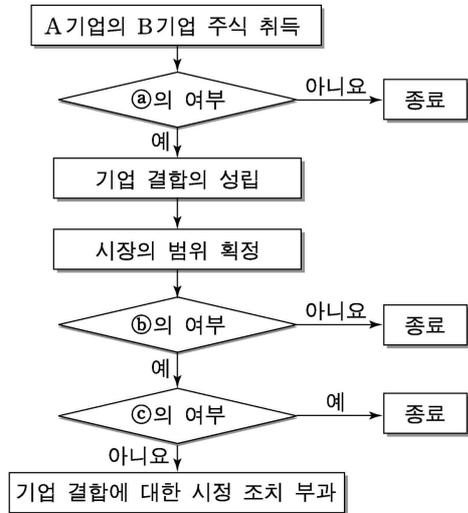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 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 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제,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위 도표에서 가장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취득에 의한 ㉠의 여부 판단입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A가 B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겠죠? 이때 지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기업 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합 심사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음으로 ㉡의 여부 판단입니다. 지문에서는 시장의 범위 확정 이후 경쟁 제한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경쟁 제한이 없다면 기업 심사는 종료되고 기업 결합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의 여부 판단입니다. 위 도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의 여부 판단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거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문에 의하면 이는 취득 기업 측의 항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입니다. 이때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결합 심사는 종료되고, 해당 기업의 결합은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만약 항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시정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에 방문해보시면 기업결합법 관련 탭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예)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 | | | |
|---------------------|-----------|-----------|
| (a) | (b) | (c)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제 존재 | - 경쟁 제한 |
|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경쟁 제한 | - 항변의 타당성 |
|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제 존재 | - 항변의 타당성 |
|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 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 <보 기> —

판매량 가격인상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 (X) A의 가격이 올랐을 때, A의 판매량은 20% 줄어든 반면 B는 15%가 증가하고 C는 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A를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A의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B나 C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B의 판매량 증가는 C보다 3배나 큰 것으로 A 소비자들은 C보다 B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 (O) A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 B의 수요량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고, B의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A의 수요량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서로의 가격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두 상품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A와 B는 동일 시장 내의 경쟁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 (X)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15%가 증가한 D입니다.
-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X) A와 D는 대체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와 D를 생산하는 회사는 경쟁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평 결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X) C와 D는 대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만큼 수평 결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를 가려 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X)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 ② ㉡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O)
- ③ ㉢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O)
- ④ ㉣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O)
- ⑤ ㉤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 (O)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8.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O)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X) 지문에 환율 상승(고환율)에 따른 경상 수지 개선은 필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은 뒷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O) 지문에서는 수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 외국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반응은 '지체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O) 국내외의 수요 구조란 국내외의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지문에서는 이러한 수요 구조에 따라, 환율이 올랐을 때 경상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 (O) 첫 문단의 첫 문장에 나타납니다. 의외로 첫 문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첫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를 풀면서 위 선지에 대한 근거를 즉각 떠올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첫 문단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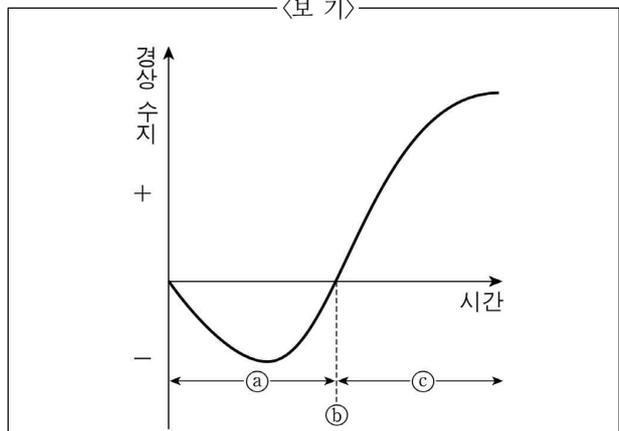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 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의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얇아진다.

→ (O) 지문에는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의 상승 비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 수지가 악화(-)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워진다면,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수준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의 골(-)이 얇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X) 지문에서 수출 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언급한 부분은 J커브 현상과는 다른 장기적인 경우입니다. 위의 ㉡구간은 단기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J커브 현상의 것이므로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X) ㉢는 경상 수지가 개선되는 시점, 즉 가격과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환율은 지문에 나타나듯 그래프상의 원점에서부터 이미 상승해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O)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경상 수지가 0이었고,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값이었다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 전(0)보다 경상 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경상 수지가 +값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 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의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X)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더라도,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X)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되더라도,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수요 구조입니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O) 뒷글에서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수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수요 구조인 경우,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추론한 위 선지가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합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X)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건은 뒷글에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 (X)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의 개선 및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뒷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읽어볼 이야기》

[Q] 지문을 보면, 환율이 상승 후에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A] 먼저, 이 글에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 수지는 미화(\$)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출량도 \$, 수입량도 \$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1\$짜리 약과와 초콜릿을 100개씩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환율은 1\$에 10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수출과 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상 수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도표1] - 환율 상승 전의 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000₩)	수입량 100개	수입액 100\$
약과: 1\$	수출량 100개	수출액 100\$

[도표1]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니 0\$네요. 환율이 1\$에 1000₩일 때 경상 수지는 0입니다. 무역 적자도 흑자도 아닌 상황이네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1\$에 1300₩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겠죠? 초콜릿은 1\$에 수입하면 환율이 1300원에 1\$니까 1300₩은 받아야 외국에 1\$를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약과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1000₩에 판매되겠지만, 환율이 올랐으니까 0.8\$에 팔아도 1040₩으로 바꿀 수 있어 이익입니다. (0.8 × 1300 = 1040) 이렇게 수입 초콜릿은 1300₩에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출 약과는 0.8\$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이라면, 수출량이 늘어나고 수입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도표2] - 환율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300₩)	수입량 50개 (50개 감소)	수입액 50\$ (-50\$)
약과: 0.8\$	수출량 150개 (50개 증가)	수출액 120\$ (+20\$)

이렇게 되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니 70\$가 남습니다. 경상 수지가 70\$ 흑자겠군요!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입량과 수출량의 변화가 큰 경우입니다. 만약,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면, 수입량과 수출량

의 변화가 작아서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입 초콜릿이 1000₩에서 1300₩으로 올랐지만, 초콜릿을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입량이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고, 미국에서 약과가 예전보다 0.2\$나 싸게 팔리지만 그다지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아 105개로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면 다음과 같이 경상 수지에 적자가 납니다.

[도표3] - 국내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상황

개당 가격	수입량 / 수출량	수입액 / 수출액
초콜릿: 1\$ (원화1300₩)	수입량 95개 (5개 감소)	수입액 95\$ (-5\$)
약과: 0.8\$	수출량 105개 (5개 증가)	수출액 84\$ (-16\$)

[도표 3]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 보니 -11\$ 적자가 났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0\$였는데, 가격 조정도 이루어졌고, 수입량이 줄었고 수출량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경상 수지는 악화된 것이죠.

위의 [도표3]과 같은 장기적인 현상과, J커브 현상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경상 수지의 악화 현상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 먼저, [도표3]이 보여주는 문제는 **수요 구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수입량이 더 줄어들거나 수출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J커브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이지요.

또한 [도표3]은 가격 및 물량 조정이 모두 끝난 결과적 상황인 것에 비해, J커브 현상은 가격 및 물량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과정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표3]에서는 환율이 상승한 만큼 초콜릿의 원화표시가격도 1300₩으로 상승되어 있는데도, J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가격조정기에는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초콜릿이 여전히 1000₩으로 표시되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 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1.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O)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이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뜻하는 관용구이죠. 평가원에서는 2016학년도 이후부터 속담이나 한자성어를 선지로 구성하는 문제는 더 이상 출제하고 있지 않으나, 기출에 나온 속담이나 한자성어는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X)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다는 뜻으로,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시작하거나 이를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X)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X)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X)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체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O)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마다 한 문단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O) '예를 들어~'로 시작하고 있으니 예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X)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유추'인데, 이 글에는 유추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O) 금리 상승(원인) →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결과) /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인) → 채권 가격 하락(과)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 (O) 채권의 의미와 종류가 모두 나타납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체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X) 채권의 현재 가치는 만기일에 받을 '액면 금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값과, 만기일까지 받을 모든 '이자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한 값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자액'을 빼버린다면 이도 저도 아닌 아무말 대잔치가 됩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X) $\text{순수익} = \text{현재 가치}(\text{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text{액면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text{매입 가격}$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X)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도 하락한다고 했으니, 반대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현재 가치는 높아요. 따라서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옳은 추론입니다.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O) 위험한 채권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두 채권 A와 B가 있다고 하고, A 발행 기업의 지급 불능 위험이 높아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A의 매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B보다 낮게 형성되겠지요? 예를 들어, A는 매입가 50만원, B는 매입가 9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순수익'은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뺀 것입니다. 물론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이긴 하지만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A는 순수익이 50만원인데 B는 순수익이 10만원이겠네요. 위험을 감수하고 A를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지요? 적절한 선지입니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 (X)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지급 불능 위험이 낮고 높음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액면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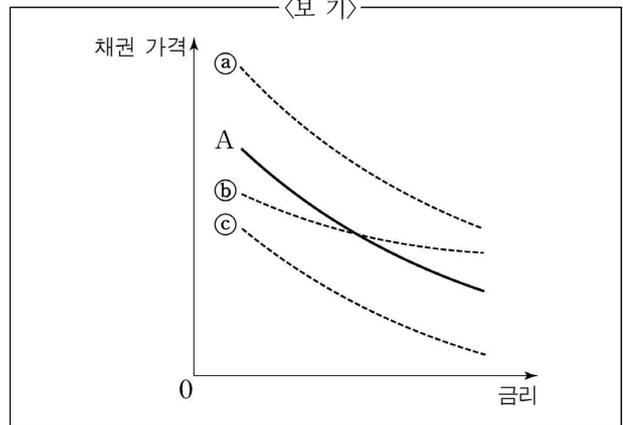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체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이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금리가 오르고 내려도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덜하다는 것이겠쥬.

<보기>의 그래프는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른 채권 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그래프네요. 원래 채권 A는 <보기>의 그래프와 같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우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는 금리 변화에 다른 채권 가격 변화의 폭이 A보다 작은 곡선-㉢가 적절하겠습니다.

→ ㉡ :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 상품은 많은데 구매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가버렸으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따라서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는 A보다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된 곡선-㉣가 적절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a | c |
| ① | a | c |
| → (X) | | |
| ② | b | a |
| → (X) | | |
| ③ | b | c |
| → (O) | | |
| ④ | c | a |
| → (X) | | |
| ⑤ | c | b |
| → (X) | | |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수도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O)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 시점이 바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지는 때라고 하네요.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O)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써봤네요.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O) 문장의 앞뒤를 바꿔 보면 더 쉽습니다.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 수준으로~’라고 재구성할 수 있겠네요. 공익 서비스나 일반 재화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면, 가격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같다는 것이죠.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O)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러한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공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 (X) 본문에서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 틀린 말입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을 뿐, 낭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제일 첫 문단에서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시 보세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의 낭비가 없다’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면 자원의 낭비가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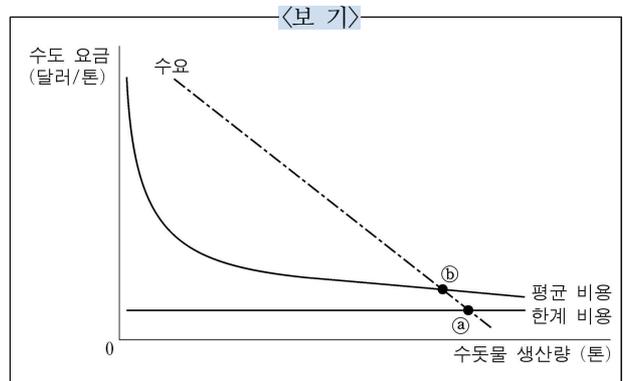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A]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O) a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금 즉, 가격이 결정되면 생산량에 따른 생산 비용만 회수되기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 비용 6억 달러가 회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몇 톤을 생산해서 팔든, a로 가격이 정해지면 수도 사업자는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O) a는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였으니,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은 항상 1달러라고 보면 되겠군요.
-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O) b는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경우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입지 않지요. 그 말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O) <보기>의 그래프의 원점에서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돗물의 생산량(톤)이 증가하죠?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곡선의 차이는 어떤가요? 계속 줄어들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1t일 때 평균 비용은 6억 1\$, 한계 비용은 1\$이니 격차는 6억\$입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6억t이라고 한다면, 평균 비용은 2\$가 되겠죠. 계속 줄어드네요. 10억t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1달러60센트)로 더욱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 (X)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하락합니다.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최대값인 상황은 요금이 a일 때, 즉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될 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톤당 평균

[A]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투입(投入)되는

→ (O) 「동사」【...에】

「1」 던져져 놓여지다.

「2」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놓여지다.

② ㉡ : 초래(招來)한다

→ (O) 「동사」【...을】

「1」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

「2」 불러서 오게 하다.

③ ㉢ : 추정(推定)하면

→ (X) 「동사」

1 【...을 ...으로】【...을 -고】【...으로】【-고】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2 【...을】

「1」 『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2」 『수학』 통계에서, 어떤 모집단(母集團)으로부터 뽑아낸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모집단의 평균·분산 따위를 헤아리다.

④ ㉣ : 지급(支給)하는

→ (O) 「동사」【...에/에게 ...을】

「1」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준다. ≒방지하다. 「반대말」 수취하다(受取하다)

「2」 『법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다.

⑤ ㉤ : 감소(減少)하는

→ (O) 「동사」【(...을)】

양이나 수치가 줄다.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이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O) 개별 경제 주체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만' 고려한다는 뜻이겠군요.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X) [A]에 예로 든 외부성 사례는 과수원 운영자가 제3자(양봉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O) 전통적인 경제학은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사회 전체의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정부 개입에 드는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서 사용하는 해결책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비효율성의 해결책으로, 또다시 비효율을 일으키는, 정부 개입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O)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극대화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을 본문에서는 '비효율성'이 초래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효율성이 충족된 것은 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여지가 없는, 이익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 (O) '거래'가 키워드입니다. 본문의 제일 처음 문장을 다시 읽어 봅시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따라서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외부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_b 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
| ㉡ | ㉢ | ㉣ |
| ① 줄이면 | 크다면 | 줄이는 |

→ (O)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에 나타난 공장주인과 주민 간의 문제를, 공장주인과 주민들의 이윤 및 사회 전체의 이윤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줄이든 늘리든 공장의 이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의 맥락을 보면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킨다고 했으니 (줄이면)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다)는 쉽게 추론할 수 있죠.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b 보다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 |
|-------|-----|-----|
| ② 줄이면 | 크다면 | 늘리는 |
| ③ 줄이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④ 늘리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⑤ 늘리면 | 작다면 | 늘리는 |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㉔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㉕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㉖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㉗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㉘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㉙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㉚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O) 윗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연금 제도의 목적 달성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1.사적 연금, 2.공공 부조, 3.공적 연금, 세 가지네요. 세 가지면 다양한 것일까요? 세 가지는 조금 단조롭나요? 애매하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1번 선지를 적절한 선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 가지 이상이 제시된다면 '다양하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O)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 제도와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으니,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 제도는 함께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X) 공적 연금 제도 자체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부조의 부작용에 대응한다는 말에는, 공공 부조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O) 공공 부조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흥청망청 쓰고, 늙어서 세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공공 부조로 먹여 살리느라 납세 부담이 증가되겠군요.
-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O)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이 매우 높아서 총 보험료 1억 원을 납부한 A와 소득이 적어서 총 보험료 5천만 원을 납부한 B가 서로 비슷한 연금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 A의 보험료가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B에게 재분배한 셈이 됩니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㉔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㉕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㉖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㉗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㉘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㉙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㉚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0.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㉑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O) 그렇습니다. (㉑이 전자이고 ㉒이 후자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삼성전자의 전자가 아니라 '앞의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 ② ㉑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X) ㉑이 아니라 ㉒의 주장입니다.
- ③ ㉑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X) ㉑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 ④ ㉒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X) 후자인 ㉒은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 ⑤ ㉒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 (X) 전자인 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정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O) (가)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 연금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런데 만약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게 된다면, 가입자의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연금 보험료의 체납 감소로 이어져 결국 연금 제도가 안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납득할 만한 선지입니다.

*체납하다: 「동사」【…을】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고 미루다.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O) 본문에 나타나듯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 가입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충분히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적 연금의 역선택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체납을 방지한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철저히 징수해야 공적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네요.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O) 고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공적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만약 선택권을 준다면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 현상입니다. 그런데 공적 연금은 가입이 의무죠. 따라서 역선택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체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를 두고 선지에서는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된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O) 고소득자는 고의로 체납하고, 저소득자는 부득이 체납하면 결국 연금 기금이 고갈되겠죠.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 (X) (가)와 (나)를 보면, 가입 강제 제도를 완화할 경우 연금 제도 유지가 쉽지 않겠죠?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㉔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㉕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㉖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㉗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㉘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㉙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㉚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42. ㉔~㉚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㉔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움.

→ (X) 도모: 「명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② ㉕ :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O)

③ ㉖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O)

④ ㉗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O)

⑤ ㉘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 (O)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을 근거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하였다.
 - (X) 사회 계층과 관련된 문헌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을 논증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옳고 그름을 밝히는 일인데, 이 글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내용이 아니죠.
- ② 중간층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 (X)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의 대립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어땠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등과 같은 것이 없네요.
- ③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여 중간층 귀속 의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X)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했다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④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 (O) 자본주의의 흐름, 즉 역사적 전개에 맞추어 중간층이 변화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네요.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들이 중간층이었는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중간층은 위축되며...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⑤ 객관적 사례를 제시하여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X) 중간층 이론이 제시되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이를 객관적 사례로 검증한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겠죠.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3. 위 글에서 설명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O) 경제 시스템이 산업 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하면서 중간층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나타납니다.

②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 (X) 위 글에서 '양극화 현상'을 수식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중간층은 ~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이었습니다. 즉 위 글에서 말하는 '양극화 현상'은 중간층이 하층으로 몰락하여, 중간층은 얇고 상층과 하층으로 몰린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중간층이 두꺼워진다면 양극화 현상은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시대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19세기 중반: 양극화 현상 발생
- 20세기 초: 양극화 현상 해소(중간층 성장)
- 세계 대공황: 양극화 현상 발생(중간층 위축)
- 20세기 중반: 양극화 현상 해소(중간층 성장)
- 20세기 후반: 양극화 현상 발생(중간층 위기)

③ 19세기 후반에는 산업 자본가에 대한 중간층의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나타났다.

→ (O) 당시에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니 밀려났다고 봐야겠지요.

④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다른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 (O) 19세기 후반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중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는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중간층이었고, 이들 중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잃고 위기 상황에 몰렸겠네요.

⑤ 20세기 후반에는 생산 및 사무 자동화의 확대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타났다.

→ (O)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급속한 기술 발전, 즉 기존에는 사람이 해야 했던 일들이 기계에 의해 자동화되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사무직이나 관리자에 대한 시장 수요를 줄어든게 만들겠죠. 그 결과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개인이 느끼는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는데,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산업 자본주의 이전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를 중심으로 중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 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중간층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으로 실업이 완화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또한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따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대량 소비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가 빚어내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하층에서의 중간층 귀속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각 사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도 강자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2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 (O) 위 글은 중간층과 중간층 귀속 의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확대되고 축소됨에 따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선지의 주장은 이러한 글의 내용으로부터 충분히 도출할 수 있겠네요.

②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간층과 하층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도록 해야 한다.

→ (X) '기대 수준'이라는 말은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근거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도출될 수 없죠. 왜냐하면 '위기'는 '기대 수준'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니까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는데 이에 속도를 맞추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이 위기에 몰렸다고 나타납니다. 이들이 기대 수준을 낮추더라도 상대적 박탈감만 해소될 수 있겠네요.

③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 (X) 본문에서는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중간층이 상층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층 귀속 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X) 어쩔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 중간층의 위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놔두자? 그런 주장은 도출될 수 없겠죠.

⑤ 사회의 각 구성원이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을 일치시키며 본분을 지켜야 한다.

→ (X) 군공신신부부자자 공자님 말씀인가요? 얼핏 맞는 말 같겠지만,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반대로 하층이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alpha \times$ 성과'(0 \leq $\alpha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O) 첫 문단에서 인센티브 계약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조금 바꿔서 풀어 놓았네요.
-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O)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은 명시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명시적 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근로자들이 보상과 관련된 성과에만 노력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었죠. 중요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면서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O)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에 기초한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 서술하였네요.
-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O)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든 경우인데 역지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을 이용하면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사용자-기업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합니다.
-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 (X)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에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강도가 높다면,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더욱 악화되겠지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α ×성과'(0 \leq α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 (O) 그렇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입니다.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 (X) 이건 명시적 계약과 관련된 설명이죠.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 (O) 암묵적 계약은 각자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 (O) 신뢰를 잃고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면 다들 암묵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죠.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alpha \times$ 성과'(0 $\leq \alpha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30.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 ㉡ ㉢
① 증가 감소 감소

→ (0) α 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증가한 추가적인 성과 중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본문에서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꼼꼼한 친구들 중 일부는 α 가 점점 커지다가 본문에 제시된 최댓값인 1이 되면($\alpha=1$) 추가적인 노력으로 얻은 성과에 대해 기업이 얻는 이윤이 0이 되므로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는 거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증가' 또는 '감소' 중 하나를 꼽아야 하는데, '증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α 가 1일지라도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노력한 것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급'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추가적인 성과의 100%($\alpha=1$)를 주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을 때보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합니다. 적어도 '기본급'만큼의 노력은 꼭 채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② 증가 증가 감소
③ 증가 감소 증가
④ 감소 증가 증가
⑤ 감소 증가 감소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7. 앞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 (O) 이 글은 상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유형(종류)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 (X)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이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X) 광고 규제의 의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X) 이 글은 '순기능에는 이런 게 있고, '한편' 역기능은 이런 게 있고'식으로 전개되는 글이 아니었죠.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 (X)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이라... 크게 보면 뭐 책임 주체를 기준으로 대립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는 강제와 자율의 대립 구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이 이 글의 핵심 요소는 아니죠. 책임 주체와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분류되는 광고의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 (X)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법적 규제의 역할이 커질 필요가 없겠지요.
- ㉡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 (X) 광고에서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 ㉢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 (X)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 ㉣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 (O)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서술되었습니다.
- ㉤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 (X)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는 (광고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해당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O)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소비자에게 유리하겠네요. 당연한 말입니다.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O) ㉡은 '기업'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걸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의 주체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지는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광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사회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서술이 있네요.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O) 혹시나 광고 표현을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이 있어, 피해를 입을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규제 없음) 훨씬 더 자유롭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겠네요. ㉡을 따르게 되면 '여러 광고 규제'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에 대한 자율성은 축소됩니다.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 (X)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적 규제는 ㉡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을 따른다면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롯이 소비자 개인이 광고의 기만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 (O)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이를 누가 책임질지에 관해 ㉠과 ㉡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과 ㉡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정하여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 (X) 소비자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늘려야 합니다.
-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 (O) 원래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대응이 시큰둥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부 기관이 적극적인 경우는 참 보기 어렵죠. 광고 업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규제는 두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보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피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 (O) 자율 규제의 주체는 광고주(기업), 광고업계 등으로 소비자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 (O) ‘견제하다’는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른다.’라는 뜻입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 등으로 피해에 직접 대응한다는 소비자 규제는 충분히 견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 (O)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는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경제적 측면, 즉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가 퍼지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의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3.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O) 공공 서비스의 제공(공급)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O)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역시 제시문 첫째 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O)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X) 수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산정(算定)은 셈하여(계산하여) 정한다는 뜻입니다. 매출과 투입 비용, 시간 등을 바탕으로 '수익'이라는 것을 계산해 낸다는 것이죠. 밑글에서 공공 서비스의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읽은 것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 (O)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세 가지가 있다고 나타나네요.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X) 특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O) '공공 서비스'라는 대상의 특성을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X) 공공 서비스의 가치나 효용(보람이나 쓸모)은 아주 짧게 나타나긴 하지만 비유적인 서술 방식은 없네요.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X)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X) 인식의 변화, 예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임과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③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⑥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②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④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③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①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5. 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 (X) 윗글에서는 민간 위탁 자체가 사회 기반 시설 공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O)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먼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점점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때까지 떨어질 겁니다.

다음으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 맡겨 두고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태만을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는 공익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X)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것, '대부분'이라고 할 만한 것은 면허 발급 방식이 아니라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 방식에서 관리 비용이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론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X)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민간 위탁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수요자(시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 (X) 민간 위탁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발급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A]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㉔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㉕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㉖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㉗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㉘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㉙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6. ㉔~㉘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㉔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O) 도서 열람, 서류의 열람, 도서관 서류나 비슷하니까 충분히 같은 말이 쓰인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열람: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

② ㉕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O) ~에 드는 비용을 세금 등의 공적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돈구멍을 메우는 느낌이 나죠? 선지의 회사의 자금 충당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해다 돈구멍을 메우는 느낌이 나네요.

*재원: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

*충당: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

③ ㉖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 (X) 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선지의 문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회사의 손익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손해와 이익이 경감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아무말입니다. 이익이 경감된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감되는 것의 주어는 부담이나 고통처럼 부정적인 어휘가 와야 적절합니다.

*경감되다: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

④ ㉗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O)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것은 서비스의 수준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역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의 수출입 거래로 생기는 국제 수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개선된다는 것은 적자가 줄어들거나 흑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므로,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 / 입시 제도 개선. / 유통 구조 개선

⑤ ㉘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 (O)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지의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사회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저해하다: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치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O) 글의 첫머리에서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지만, 과학과 달리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논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같은 19세기 시민 사회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은 헤겔과 뒤르켐의 사례를 검토하며, 사회 이론이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X) 예외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X) 예상되는 반증*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증: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X)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주장도 없습니다.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 (X)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동일한 사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사례가 아닙니다. 일종의 연구 주제, 연구 분야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말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무규범 상태에 대해 뒤르켐은 이렇게 분석했고, OOO는 이렇게 분석했다는 식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O)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X) 혁명 이후 프랑스는 계급 갈등과 빈부 격차가 만연해 있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르 샤플리에' 법을 통해 노동자나 자본가(고용주) 모두가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단체를 결성하면 때싸움이 되고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법은 90년간 시행되었음에도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개인들의 사익 추구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시민 사회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나오네요. 따라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선지 내용은 틀렸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O)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O) 사익 추구가 건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 지향적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혼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각축장', 즉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터와 같은 혼란한 상황,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인식했다고 봐야겠습니다.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 (O) 헤겔은 공리주의가 국부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들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네요.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사회 문제를 조장한다고까지 보았습니다.

※참고※ 공리주의의 공리는 公利, 즉 공공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功利, 즉 공명과 이익을 뜻하는 말입니다. utilitarianism을 번역한 말인데요, '유용주의'나 '이득주의'라고 번역했다면 더 직관적이었을 것 같네요. '무엇이 선한가?'란 질문에 '유용한 것이 선이다.'라고 대답하며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주장입니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O)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X) 뒤르켐의 주장입니다.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X) 둘 다 아니고요, 헤겔의 시민 사회론에서 '복지 행정 조직'이 해야 할 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X) 공리주의를 억제한다는 말은 헤겔이나 뒤르켐이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행할 주체로서의 직업 단체는 뒤르켐만 해당합니다.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 (X) 헤겔이든 뒤르켐이든 직업 단체는 시민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헤겔의 경우, 본문에 '연결 고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맥락이 전혀 다르게 쓰였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겔 파트에서 직업 단체와 복지 행정 조직이라는 두 기구는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라고 했습니다. 즉 두 기구가 이상 국가로 가는 열쇠라는 뜻이죠. 반면 선지의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는 문장에서 '연결 고리'란 매개체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국가와 시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란 뜻이죠. 소통의 창구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르켐의 직업 단체는 국가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 내에 위치하는 국가와의 연결 고리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

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X) 사회 과학이 왜 사회 과학이겠습니까? 사회 문제를 연구할 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겠죠.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X)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X) 사회 이론은 철저하게 시대의 산물이고,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시 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물리 법칙처럼) 객관적 사회 이론은 성립할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X) 그냥 그대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네요.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 (O) 사회 이론은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 상황, 즉 시대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 이론이든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밑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 (O) 이 제도(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을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네요.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 (O) 그렇습니다. 손해 배상금 속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중복제재냐 아니냐 찬반양론이 있다고 합니다.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 (O) 세 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 (X)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어디에도 없네요.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 (O)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자본과 싸울 수 있는 개인은 매우 드물죠. 법원 문턱은 무척이나 높고요.) 그럼 행정 기관이 적발해서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인데, 적발 가능성이 낮은 불법 행위는 피해자만 엉영 없고 불법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면서도(배상금이 크면 금전적 피해가 크니 억제력이 높겠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것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 (O) 과징금은 행정적 수단이 맞습니다.
-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O) 담합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말이겠네요.
-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O) 손해 배상은 민사적 수단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 (O) 세 가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 (X) 벌금으로 제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기업이 형사 고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이겠지요. 대부분 과징금으로 제재한다고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 (O)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벌금이나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도움’이란 금전적인 도움, 구제를 말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것네요.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O)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밖에 없어서 너무나 쉽게 확정되네요.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 (X) ‘벌금’은 형사적 수단이지요. 행정적 제재 수단은 과징금입니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O)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 배상금 전체 금액은 다 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배상금 = 피해자 손해액 + 가해자 징벌 성격의 배상금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전체 배상금에서 손해액을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미되다

「1」 음식에 양념이나 식료품이 더 들어가 맛이 나게 되다.

「2」 본래의 것에 다른 요소가 보태어지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 (X)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걸까요? 문제를 읽어 봅시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선지에서 말하는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니 국가에 귀속된다는 선지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겠네요.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 (O)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유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징벌적 배상으로 손해의 세 배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용이 의심될 경우 하도급업체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 (O) 그렇습니다. 손해액 이외의 금액은 벌금과 유사한, 즉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입니다.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 (O)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이용하면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 (O) 이 글에서 밝히기를,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도급거래, 즉 하청업체가 기술자료를 유용당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기>의 법이 만들어졌겠죠.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X)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은 글에 나타나 있죠. 자본과 노동의 이동, 계급적 연대를 잃고 분절화된 노동자들, 가족의 해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X) 이 글에서는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새롭게 규정한 적이 없죠.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O)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 즉 벡과 바우만의 견해겠네요. 두 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바로 이 글의 전부입니다.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X) 역사적 기원 같은 건 안 나왔죠. 그에 대한 가설도 없었고요.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 (X)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은 언급된 것이 없죠.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③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①‘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⑥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②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④‘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④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⑤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O)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있죠? 이 문장은 노동자들이 예전과 달리 계급적 연대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급적 동질성을 잃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급으로 분절화되었다는 뜻이죠.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X) 국가의 통제력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본문에 나타나네요.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O) 가족 해체 현상,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선사 시대부터 20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거주 형태였어요. 대다수는 가족의 형태로 거주했거든요.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O)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과 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방식의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참고로 연대와 유대의 뜻 한번 읽고 가세요.

*연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유대: 끈과 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 (O) 바우만은 현대인이 개체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은 서로 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서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흐르겠네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O) 본문에 ‘과거와 달리’라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죠.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O) 액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엄격하게 따지면 좀 틀린 문장 같기도 한데... 그냥 “물체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한 개념이다.” 정도로 서술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유추하다: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X)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은 낙관적으로 보는 개념이고, ㉡은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O) 벡은 핵무기,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우만도 핵 확산, 환경 재앙 등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지금 이 해설을 쓰는 순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가, 유럽에서는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 (O) “전 지구적 위험”이라는 어휘가 동일하게 쓰였네요.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쫓아내거나 몰아냄.

→ (X) 방치: 내버려 둠.

방치와 비슷한 말로 방관, 좌시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방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좌시: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함.

② ㉡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O)

③ ㉢ : 곁으로 나타냄.

→ (O)

④ ㉣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O)

⑤ ㉤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 (O)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현저하다: 뚜렷이 드러나 있다.

계급적: 『사회 일반』 일정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의 집단이나 그 사회적 지위에 관한.

추세: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사뭇: 아주 단판으로.

체계적: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

규정하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

가변적: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잉여 인간: 남아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면화되다: 정신적·심리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역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X) 소비자 개념은 정의된 바 없으며 유형도 제시된 바 없죠.
-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X)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은 제시된 바 없습니다.
-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 (X)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비유된 바 없습니다.
-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 (O)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은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입니다. 각 정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경쟁 정책: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을 유발하여 소비자 권익에 기여한다.
 2. 소비자 정책: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실현시킨다.
-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 (X) 역사적, 통시적 고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④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①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⑥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①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③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⑥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③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⑤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중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③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②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중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 (O) 독점은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비효율을 해소하여 배분적 효율이 향상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 ②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O)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일지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 (X) 비용 절감의 측면, 즉 생산적 효율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효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더 싸게 만들어도 판매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죠. 기업은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 (O) 경쟁 정책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소비자 정책을 집행하고 있죠.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 (O) 소비자는 기업과 대등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자사 상품에 대한 정보를 99.9%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이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죠. 심지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오직 기업이 제공한 정보만 얻을 수 있죠. 또 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일개 소비자와의 분쟁에 있어서도 압도적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이익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만 가격 인가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가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 (O) 기업이 생존을 위해 생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창출되는 '여력'이라고 했으니 기존에 투입되던 비용에서 절감된 만큼을 뜻하겠네요. 그러니 그만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같은 값에 더 좋은 제품) 가격을 인하할(더 싼 값에 같은 제품) 수 있게 되겠죠.
- ㉡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 (O) 경쟁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유해 상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겠죠. 경쟁 환경이 기업의 도덕성을 높여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를 수습해주시도 않을 겁니다.
- ㉢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O) 경쟁 정책 자체가 철회되면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담합 행위가 발생할 수 있죠. 둘 모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 (O) 경쟁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 ㉤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 (X) 소비자 정책에서 취하는 수단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역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0) ㄱ, ㄴ, ㄷ은 모두 소비자 정책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ㄷ의 경우 관계당국(정부)이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사례인데, 이렇게 국가 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⑤ ㄴ, ㄷ, ㄹ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낡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이바지하는

→ (O) 기여하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② ㉡ : 내리는

→ (O) 인하하다: 가격 따위를 낮추다.

③ ㉢ : 늘리더라도

→ (O) 증진하다: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

④ ㉣ : 밀려난

→ (O) 퇴출되다: (조직체나 조직원 따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물러나게 되다.

⑤ ㉤ : 세울

→ (X) 유지하다: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권익: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집행하다: 실제로 시행하다.

담합: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

여력: 어떤 일에 주력하고 아직 남아 있는 힘.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수반되다: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사후: 일이 끝난 뒤. 또는 일을 끝낸 뒤. (여기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뒤)

교섭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와 의논하고 절충하는 힘.

충동구매: 물건 따위를 살 필요나 의사가 없이, 물건 따위를 구경하거나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사고 싶어져 사는 행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X)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의 영역(생산 활동)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 겠죠.
-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X)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사색적 삶의 위상은 활동적 삶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과학 혁명과 함께 두 삶의 위상이 대등해졌다고 나오네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아직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X) 청교도 윤리는 근면 검약과 직업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 즉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윤리관이 널리 퍼진다면,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그런 인식이 심화된다고 추론할 수는 없겠습니다.
-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O) 시간-동작 연구는 노동자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모색하는 연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동자의 ‘동선’을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지 않고, 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어 효율이 높아지도록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통제받는 노동자의 경우, 명령에 따라 근육을 사용하는 생체 기계에 가까워지겠죠. 이는 순수한 육체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되기 전의 노동 현상은 이러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추론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노동자가 일련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두뇌노동과 깔고 두드리는 육체노동이 구분되지 않는 융합된 형태였을 것입니다.
-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 (X)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실용 학문이 출현한 것이 아니죠.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실용 학문과 산업체 소속 연구소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설명이네요. 선지 구성에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니 유의하세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㉔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㉕겸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㉖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㉗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㉘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㉙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2. ㉙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㉑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 (X) 기술과 산업 현장이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는 말은, 그것 이외에 굳이 ‘성찰’이나 ‘사색’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㉒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괴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 (X)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일’, 즉 생산과 노동이라고 단정하는데, 사색이나 성찰이 설 자리는 없겠군요.
- ㉓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 (O) ㉙은 ‘의미 없는 부지런함’, 즉 무의미한 파닥거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여유로운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겠죠. 또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선지의 주장과 상통합니다.
- ㉔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X) 나태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더 빨리,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는 말이니 활동적 삶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 ㉕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 (X) 인간이 기계라면, 굳이 사색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계답게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요. 이 선지도 ㉙과는 관련이 없겠네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 (O) 규율은 어쨌든 강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기계의 속도에 기초한 근대의 노동규율은 타자의 노동 방식과 속도를 강제하고, 이는 곧 타자의 착취로 이어집니다.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 (O) 더 좋은 성과를 내려는 내적 유혹은 자신의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이어질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 (X)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는 불변입니다.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 (O) <보기>의 견해는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뜻입니다.
- ⑤ 다양한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O)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은 성취 욕망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자신을 소진하게 됩니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㉔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㉖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㉘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㉚묘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㉜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㉞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4. ㉔~㉞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O)

② ㉖: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 (O)

③ ㉘: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 (O)

④ ㉚: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O)

⑤ ㉜: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X) 포섭: 상대방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м.

참고로 선지의 뜻풀이는 ‘포용’의 뜻풀이에 가깝습니다.

포용: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생계: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인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과학 혁명: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자연 과학 분야의 획기적 변혁.

청교도: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교파.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쾌락을 죄악시하고 사치와 성직자의 권위를 배격하였으며,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였다.

소명: 『기독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징표: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불식하다: 의심이나 부조리한 점 따위를 말끔히 털어 없애다.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초래되다: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다.

단적: 곧바르고 명백한 것.

메커니즘: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비약적: 지위나 수준 따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되는.

소진하다: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지다. 또는 다 써서 없애다.

강박증: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할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정신 이상증.

폭주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하게 달리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 (X)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 ②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X)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O) 이 글은 지식의 성질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개념인 '암묵지'를 기반으로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지식 경영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도 설명하고 있네요.
- ④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X)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 ⑤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X)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선지가 되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험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O) 본문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에도 암묵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 말은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O) 본문에 있는 문장을 조금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평가원은 앞뒤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편한 선지 구성 방식입니다. 사실 완전히 100% 옳은 선지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긁어 쓰면 매력력이 떨어지고, 다른 용어로 바꿔 쓰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X) 암묵지와 명시지가 서로 뒤바뀐 설명입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명시지가 더 공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O) 본문에서 노나카는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조직 구조가 혁신되면 재설계는 필연적이겠네요. 조직 구조 혁신이랑 조직 구조 재설계랑 무슨 관계냐고요? 혁신의 뜻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 (O) 암묵지 개념은 폴라니가 만든 겁니다. 노나카는 이 개념을 응용해서 지식 변환 과정을 유형화한 인물입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혁신: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X) 공동화 사례입니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X) 특허 기술은 문서화된 지식이죠. 명시지입니다. 이것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은 명시지를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이니 연결화입니다.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O)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사용설명서입니다. 이는 명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숙련 노력(반복 사용)을 통해 감각적 지식을 얻었다고 했으니 명시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X) 내면화 사례입니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 (X) 공동화로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선지입니다. 물론, E사의 직원이 암묵지를 새로이 형성한 것은 맞습니다.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했다’고 했으니 이는 암묵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는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타자의 암묵지가 E사 직원의 암묵지로 변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중의 대다수 해설서는 E사의 직원이 암묵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을 표출화로 해설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의 내용은 표출화가 아닙니다. ⑤번 선지는 노나카의 4가지 지식 변환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사 직원의 행동은 기존의 지식을 변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암묵지를 발견하고 창출한 뒤, 이를 활용한 사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변환은 없습니다.

물론 ‘청소기 디자인’을 ‘명시지’로 보아 ‘표출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 완성된 청소기 디자인은 암묵지에서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수하늘소 모양 청소기 디자인은 ‘명시지’가 아닙니다. 명시지는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처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입니다. 청소기 디자인에는 그러한 지식이 활용된 것일 뿐, 청소기 디자인이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은 결코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O)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없었으니, 이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 및 동기 부여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 ②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O) F사에서는 무형의 지식을 갖춘 직원들에게도 보상을 해서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높일 필요가 있죠.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O) 숙련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그들의 암묵지가 사라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F사. 암묵지는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훈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X) 이걸 F사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⑤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O) <보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무형의 지식’의 하나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한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이 요구된다는 선지 내용은 적절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 (O) 사단이 갖춘 성질인 사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2.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3. 운영 기구를 둬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
- ㉡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 (O)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했지요.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 ㉢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O) 법인으로登記된 사단은 사단 법인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사단은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취득하여 소유권, 채권, 채무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겠네요.
- ㉣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 (O) 사단 법인이든 법인이 아닌 사단이든, 사단이라면 모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 ㉤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 ➔ (X) 사단 중에서도 법인으로登記된 '사단 법인'만이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일 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자격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즉, 이 선지는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어야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6. 앞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O) 법이 어려운 이유를 아시나요? 세상의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만날 수 있어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맞습니다.
- ㉡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X) 법인격은 회사, 즉 사단 법인인 주식회사가 갖는 것이고요,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일 뿐입니다.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고요.
- ㉢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X) 주주 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X) 본문에서 주주 총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죠. 회사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주주 총회를 열어서 수많은 주주들이 일일이 회의하고 의결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사진을 구성해서 선임하고,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 ㉤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 (X)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상속 등의 방식으로 일인 주식회사가 될 수 있대네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O)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이니 (사단) 법인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했으니 적절한 선지입니다.
-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O) 사단 (법인)이 진 빚을 갚을 의무는 사원 개인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O)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개정된 상법과 관련된 이슈를 말하는 중이니, 사단성 중 하나인 ‘사람들의 결합’과 관련된 성질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O)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 독자적 실체로서의 경영이 아닌 어떤 개인의 독단적 영업이란 뜻이겠죠.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의 장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구매 없이 내 뜻대로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재벌 총수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라는 운영 기관의 의결이 필수적이죠.
-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 (X) 회사의 ‘이익’이 대표 이사인 일인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했을 뿐, 자산이 감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쓴 것도 아니었죠. 여기서 ‘허울은 실속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고 봐야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X)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일인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것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본문에 나타납니다.
- ㉡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X) 이 글에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정보는 일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뿐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 남용의 조항을 인용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나타냅니다.
- ㉢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X)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법인격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죠. 1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이 부인되더라도 영구히 박탈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 ㉣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X)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 (O) 법인격은 특정한 거래 관계에만 예외적으로 부인된다고 본문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 목적은 허울뿐인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 한 명뿐인 주주인 대표 이사에게 묻게 하려는 그 목적도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부정되지 않으면 법인인 회사만 책임을 지고 사원인 대표 이사는 책임이 없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①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②사원 개인에게까지 ③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⑤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⑥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⑦‘법인격 부인**

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겸비(兼備)하면

→ (X) 겸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ex. 쇼핑몰은 넓은 매장과 주차 공간을 겸비했다.

㉠과 바꿔 쓰기엔 어색합니다. ‘겸비하다’는 목적어의 구성 요소가 두 개 이상 있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장에서 목적어는 ‘요건’뿐입니다. 겸비하다를 쓰면 어색하죠.

② 구비(具備)하면

→ (O) 구비하다: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

③ 대비(對備)하면

→ (X) 대비하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

④ 예비(豫備)하면

→ (X) 예비하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

⑤ 정비(整備)하면

→ (X) 정비하다: 「1」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2」 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다. 「3」 도로나 시설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정리하다.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채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독자적: 「1」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혼자서 하는.

실체: 「1」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

존속하다: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다.

상법: 「2」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 사법.

출자하다: 자금을 내다.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양도: 「2」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이사: 법인(法人)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퇴색하다: 「2」 (비유적으로) 무엇이 낡거나 몰락하면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볼품없이 되다.

귀속되다: 「1」 재산이나 영도,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리게 되다.

부인하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7.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X)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이 조금 나타나는 하지만, 그것이 위글의 핵심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법률 규정(상법의 계약 해지권 관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네요.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X)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은 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책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보험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O) 위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지 의무에 관해서도 절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네요.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X)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X)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글에서 소개하는 상법의 내용은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 의무'가 없다면 본문에 나타나듯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되는, 보험 상품의 거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의 '고지 의무'는 보험 상품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험사가 청약에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X)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만 해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해지에 관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케이스,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뿐입니다.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 공정한 보험이 된다.

→ (X)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합니다.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X) 사고가 나야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실... 보험금은 평생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라고 봅니다.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O)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 (X)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고지 의무 위반이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죠.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 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X) 보험료가 두 배가 되면 보험금도 두 배가 되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두 배가 되어야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댓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A의 구성원을 100명으로, 인당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총 보험료가 10000원고 사고자는 10명이겠네요. 공정한 보험이니 사고자 10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총 보험금도 10000원일 테니, 사고자 1명에게는 각 1000원씩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험금의 기댓값은 1000×0.1 이니 100원, 보험료 100원과 똑같네요. 공정한 보험입니다.

이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변화하겠습니다.

보험료	총 보험료/금	사고자	보험금	기댓값
100원	10000원	10명	1000원	100원
200원	20000원	10명	2000원	200원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X) 1번 선지와 반대네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려면 (공정한 보험이니까) 보험료도 두 배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두 배가 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B의 구성원을 100명으로, 인당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B는 사고 확률이 0.2니까 사고자가 20명입니다.

보험료	총 보험료/금	사고자	보험금	기댓값
100원	10000원	20명	500원	100원
200원	20000원	20명	1000원	200원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X)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A와 B는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르죠. 당연히 보험료율은 서로 다르겠습니다. A는 보험료율이 0.1 즉 10%이며 B는 보험료율이 0.2로 20%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X) A는 사고 발생 확률이 10%이고 B는 20%인데 같은 보험금을 타는 상품이라면 (그리고 그 상품이 공정한 보험이라면) 당연히 B 보험료가 더 비싸야겠죠. 정확히는 두 배가 되어야 합니다. (1번 선지와 2번 선지 해설에서 사고자가 받는 보험금이 1000원일 경우의 보험료는 A가 100원, B는 200원이죠.)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 (O) 공정한 보험에서는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댓값이 서로 같습니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서로 같을 것입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40. 위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X) 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달리, 보험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O) 고지 의무를 통해 파악한 보험 가입자의 '중요한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료 책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O)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보험 가입자가 직접 밝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O) 보험 가입자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보험사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고지 의무는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줄여 줄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O)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할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

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가]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X) 해지를 해야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사는 계약 해지권이 없죠. A사는 계약 해지권이 없으니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없겠죠.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X)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X)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A는 중대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 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도 없어요.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O)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X) 사고 발생 즉시 알렸든 어쨌든 늦었어요. 반드시 계약 전에 알렸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죠.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X) 밑글의 대비는 아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선지의 대비는 두 번째 뜻이고요.

대비對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

대비對備: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

②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O)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③ ㉢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O) 인상: 「2」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

④ ㉣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O)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⑤ ㉤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 (O) 전가: 「1」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씩음.

※ 이 외에도 이번 글에서 알아두면 좋을 단어

재화: 『경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서비스: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

상응하다: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다.

수령하다: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다.

보전하다: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우다.

청약: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

고지: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본연: 「2」 본디 생긴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